

냉전시기 분단국에서 기록관리의 국가·사회적 역할: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아카이브 역사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노명환**

차 례

- I. 서 문
- II. 독일연방공화국 기록관리의 국가·사회적 역할
 - 1. 탈나치화와 기록관리
 - 2. 독일통일과 기록관리에 의한 탈나치화 작업의 확대와 유럽차원
 - 3.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동독) 과의 기록관리 교류
- III. 대한민국 기록관리의 국가·사회적 역할
 - 1. 유구한 한국의 기록관리 전통과 기록관리 근대화의 실패
 - 2. 분단과 독재체제하의 기록관리
 - 3. 민주화와 남북화해 정책 그리고 기록관리의 발전
- IV. 결 론

I. 서 문

기록관리는 무엇인가? 기록관리를 왜 하는가? 기록관리는 어떠한 국가·사회적 역할을 하는가? 기록관리는 국가·사회적 조건들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교수

는가? 물론 이러한 의문들은 특별히 제기할 필요성이 없는 당연한 문제제기들이
 것 같다. 그러나 기록관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사색
 그리고 이에 바탕한 기록관리의 본질과 존재이유에 대한 탐구는 끊임없이 수행되
 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록관리가 수행하는 국가·사회적 역할에 대해 그리고
 거꾸로 국가·사회의 제 조건들이 기록관리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국가·사회
 의 구성원들이 본질적으로 잘 인식하고 있을 때 기록관리가 전 국가적 그리고 사
 회적 관심 속에서 그 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록관리의 역
 할이 국가·사회적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초국가적 국제 사회 그리고 세
 계 공동체를 위해 또한 필수적이다.¹⁾ 이러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필자는 기록관리의 국가·사회적 차원에 국한해서 논하고 후자의 경우는 차후의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필자는 본고에서 특별히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 시대에 분단국의 역사에
 서 기록관리의 역할이 어떠한지 어떠한 제약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본
 다. 즉, 제 2차 세계대전 전후 맥락의 역사 속에서 냉전으로 인해 분단되어 있는
 국가들에서 기록관리 발전에 어떠한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기록관리가 어떠한
 특별한 사명과 과제를 갖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일과 한
 국 그 중에서도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대한민국(남한)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
 이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독일은 나치 전쟁범죄 국가로서의 처벌과
 뒤이어서 진행된 냉전으로 인해 처음에는 4개 점령지역으로 후에는 2개의 국가
 건설(독일연방공화국, 독일민주주의공화국)로 분단되었다. 독일연방공화국
 (서독)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연방주의를 표방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근
 간으로 하여 미국 및 영국 그리고 프랑스 점령지역이 통합되어 건국되었다. 소련
 점령지역이었던 곳에서는 공산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동독)이 건국되었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기록관리는 탈나치화의 역사적 과

1) 이에 대해서는 오동석, "기록관리의 국가·사회적 역할: 민족주의·초민족주의와 집단적 기억을 중
 심으로",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2008) 참조.

제와 깊은 연관을 맺지 않을 수 없었고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2개의 분단국가 성립으로 인해 독특한 조건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하에 놓여 있던 한국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함과 더불어 독립하게 되었고 냉전의 전개와 함께 대한민국(남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으로 분단되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립관계에 놓이고 1950-53년 사이의 3년 동안에는 민족상잔의 불행한 전쟁을 경험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기록관리는 탈식민지화의 역사적 과제와 실질적 전쟁으로 까지 비화된 냉전의 남북대결 상황 속에서 그 특별한 운명을 개척해야 했다.

이렇듯 제 2차 세계대전 후 냉전 시기에 분단된 한국과 독일은 독특한 기록관리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사실에 주목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들이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교적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대한민국(남한)의 경우를 비교해 봄으로써 그 상황의 본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양 국가의 것을 비교하면서 다음의 사실에 주목하는 것도 흥미롭다. 기록의 생산 증대와 인쇄술의 발전은 서로 깊은 상관관계에 있다. 그런데 한국과 독일은 공히 찬란한 인쇄술 발명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로서 유명하다. 한국은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하고 직지를 간행하였고 그 보다 후에 이루어진 독일 구텐베르크(Gutenberg)의 금속활자 발명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기록관리의 전통에 있어서도 한국이 역사적으로 눈부신 업적을 쌓아 왔는가 하면 독일이 또한 그러하였다. 다만 근대 말기부터 현대에 이르러 한국의 기록관리가 국가적 존재의 쇠락과 함께 쇠퇴한 반면에 독일의 경우는 이 시기에 더욱 발전하였다.

II. 독일연방공화국 기록관리의 국가·사회적 역할

1. 탈나치화와 기록관리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4개의 점령지역으로 분할되고 이어서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되었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하고 동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진행된 포츠담회담에 의거하여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점령지로 4분할되었다. 이는 제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었던 독일의 나치체제 유산을 승전국들이 철저히 청산하고 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당시 회담의 의결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다가 미국과 소련 사이에 점차 갈등관계가 심화되고 이 갈등이 서방 세계와 동유럽 사이의 냉전으로 비화됨에 따라 1948년 미국, 영국, 프랑스 점령지역이 합쳐져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이 탄생하고 같은 해에 소련 점령지역은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이 되었다.²⁾

1919년에 설립된 독일 제국아카이브(Reichsarchiv)가 포츠담에 있었고 포츠담은 소련 점령지역, 후에 동독에 속했기 때문에 제국아카이브는 고스란히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의 소유가 되었다.³⁾ 이는 독일에서 국가의 분단과 함께 기록관리 제도의 분단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극히 불평등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독일은 19세기 낭만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와 독일통일 그리고 그

2) Wilfried Loth, *Die Teilung der Welt*, München 1980

3) Hans Booms (Hrsg.), *Das Bundesarchiv. Geschichte und Organisation, Aufgaben, Bestände*, Koblenz 1988, pp. 5-6. 1806년까지의 동독지역 기록들은 신성로마제국의 수도였던 비엔나(Vienna)에 소장되었고, 1866년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프러시아가 승리하여 북독일연방이 성립된 1867년부터 나치정권이 들어서서 시기인 1933/34년까지의 기록들은 포츠담에 보존되었다. 나치시대의 기록들은 점령시대의 기록들과 마찬가지로 점령 연합국들(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 의해 압류되었다. 점령 연합국들은 이 기록들이 독일 나치체제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과 전쟁의 원인 경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치의 구체적인 범죄 상을 규명하는데 필요하다고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이 기록들은 독일의 근본적인 탈나치화 정책과 작업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Klaus Oldenhage, "Prosecution and Resistance, Compensation and Reconciliation: Two Repressive Systems in one Country", in: *Comma, International Journal on Archives* 2 (2004), p. 75.

과정에서 실증사학의 발전과 함께 기록관리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⁴⁾

이러한 기록관리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이 분단되면서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은 제국기록관의 모든 기록들을 상실한 나라로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독은 동독과 수차의 협의 과정들을 거쳤으나 궁극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당시의 독일 양 지역의 아키비스트들은 모든 독일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분단이 곧 극복될 수 있는 임시적인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냉전의 골이 깊어지면서 그 분단 극복은 점차 쉽지 않아 보였다. 그리하여 1949년부터 산출되는 정부 기록들을 관리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에 직면한 서독은 1952년 연방 수도 본(Bonn)에서 가까운 코플렌츠(Koblenz)에 독일연방기록관을 설립했다. 따라서 이 아카이브는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건국 이후 생산되고 있는 기록들을 이관 받는 작업을 할 뿐 그 전의 기록들을 보유하지 못한 채 출발하였다. 그러는 도중 1950년대에 미국과 영국이 그들의 점령시기인 1945-49년 사이의 기록들 그리고 특히 나치시대에 관한 기록들을 반환하기 시작하였다.⁵⁾ 이렇게 회수된 기록들과 더불어 자체적으로 기록들을 수집하는 노력을 활발히 한 결과 코플렌츠의 연방기록관에는 1949년 이전의 기록들이 쌓여갔다. 지방분권주의 전통이 강했던 독일에서는 지방기록관들이 독자적인 발전을 해왔고 그 위상이 컸다. 1919년에야 비로서 국립기록관인 제국아카이브를 가지게 된 독일이었지만 유구한 기록관리 전통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지방기록관들의 존재에 기인했다. 이러한 지방기록관들로부터 연방정부와 관련되는 기록들을 복사하여 수집하였다. 전국적으로 유실되거나 방기된 기록들을 또한 수집하였다.

서독은 이렇게 환수된 기록들 그리고 새로이 수집된 기록들을 토대로 1950년대 말부터 탈나치화 작업을 떠나갔다. 이러한 기록들이 나치 범죄자의 조사를 위

4) 이에 대해서는 노명환, “19세기 독일의 역사주의 실증사학과 기록관리 제도의 정립. 랑게, 지벨 그리고 레만과 출처주의/원질서 원칙”, *기록학연구*, 제 14호 pp. 359-388. 전통적인 기록관리의 핵심적인 두 원칙인 출처주의 원칙과 원질서 원칙이 1881년 독일에서 정립되었다. Ibid., p. 378.

5) 동독은 이보다 앞서서 소련으로부터 위의 기록들을 반환받기 시작했다. 2004년 프랑스는 나치 시대의 기록을 2004년에서야 처음으로 반환했다.

한 증거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루드비히스부르크 (Ludwigsburg)에 본부를 두고 설치된 나치범죄자 조사를 위한 최고기관(head office)을 위해 연방기록관은 주요한 탈나치화 작업 동반자가 되었다. 위의 루드비히스부르크 나치범죄 조사 최고기관은 나치 범죄자들을 추적하여 단죄하고 희생자들을 확인하여 배상·보상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를 위해 범죄 수사 담당 연방 검사들과 연방아카이브의 아키비스트들 간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졌다⁶⁾. 당시 아키비스트들은 기록들을 공급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기록의 진위와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작업까지 수행하였다. 수사관들과 아키비스트들은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서로 협력하였다. 연방기록보존소는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증거들의 보고로서 독일의 영구기록들을 보존하고 있는 다수의 외국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들은 이 기록들을 획득하여 활용하고 연방기록관으로 하여금 복제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었다.⁷⁾ 연방기록관의 보존 기록이 더욱 풍성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많은 나치범죄자들이 밝혀지고 처벌되었으며 많은 희생자들의 복권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⁸⁾

이렇듯 서독은 기록관리 기관의 지원에 의거한 탈나치화 과거청산을 활발히 지속해 나갔다.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한 후에 분단된 독일 중 서독이 진정한 연방주의와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하여 탈나치화 작업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러한 연방아카이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다. 서독이 연방주의를 추구했던 것은 나치시대의 히틀러를 정점으로 하는 독재체제의 중앙집권주의 폐해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자 한테서 기인했다. 기록관리 제도에서도 중앙집권주의 대신 연방주의를 채택한 것은 이러한 체제적 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목적에 기인했다. 그리하여 연방주의는 독일에서 민주주의

6) Klaus Oldenhage, "Prosecution and Resistance, Compensation and Reconciliation: Two Repressive Systems in one Country", in: *Comma, International Journal on Archives* 2 (2004), p. 78.

7) Ibid..

8) Klaus Oldenhage, "Prosecution and Resistance, Compensation and Reconciliation: Two Repressive Systems in one Country", in: *Comma, International Journal on Archives* 2 (2004), p. 75-77.

를 실현하는 핵심의 사상이며 제도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서독 연방아카이브는 나치과거 청산과 새로운 독일의 정향성 (orientation)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기관이 되었고 이 청산작업을 통해 더욱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⁹⁾

그런데 연방기록관이 이러한 작업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심적인 고통을 느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기록들을 통해 나치시대의 과거들이 드러나 범죄자가 아닌 개인 가족들이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자들을 살해했던 나치범죄가 밝혀지는 경우 그 희생자의 가족들은 다시한번 상처를 받아야 했고 그 사실이 현재의 이웃들에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그 상처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¹⁰⁾

2. 독일통일과 기록관리에 의한 탈나치화 작업의 확대와 유럽차원

1990년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기록관리 제도의 통일이 또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동독에 보존되어 있던 기록들이 또한 이 작업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제국기록관이 포츠담에 소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독이 소유할 수 없던 기록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증거에 의거한 탈나치화 작업이 재점화될 수 있었다. 물론 이 작업이 재점화될 수 있었던 데는 탈나치화 작업의 역사적 시간을 제한하지 않은 서독인들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작동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국가적 의지를 기록관리가 뒷받침해 주었던 것이다.¹¹⁾

독일이 통일되는 시점은 또한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변화가 이루어져 소위 말하

9) Klaus Oldenhege, "Prosecution and Resistance, Compensation and Reconciliation: Two Repressive Systems in one Country", in: *Comma, International Journal on Archives* 2 (2004), pp. 75-80. 이는 독일의 탈나치화 작업에 있어서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잘 보여준다.

10) Klaus Oldenhege, *Prosecution, Resistance, Compensation, Reconciliation and Democratisation. The Heritage of two Repressive Systems in one Country. The Case of German Archives* (2005년 8월 한국기록학회 국제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

11) Ibid..

는 ‘철의장막’이 제거된 시기였다. 이와 더불어 독일 연방아카이브는 탈나치화를 위한 기록관리 협력 국제연대를 동유럽 국가들로 확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획기적인 계기는 2000년 8월 “기억, 책임, 미래 재단”의 창설이었다.¹²⁾

연방기록관은 독일의 “기억, 책임 및 미래 재단(Foundation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및 적십자 국제조사국 그리고 나치에 탄압을 받은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사설 단체 등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받아 합동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이지만 인터넷 시스템을 부설했다. 그리하여 국가, 지방자치체 및 기업기록관 또는 기타 유관기관에서의 조사를 가속화했다. 이들 중에는 특히 다수의 폴란드 국립기록관들이 언급될 만하다. 왜냐하면 강제노역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형태의 증거 대부분이 영구적 가치를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파괴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 독일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던 40,000명 이상의 외국인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성공이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200개 이상의 독일, 폴란드 및 다른 외국의 기록관들이 온라인으로 수행한 상호 협력의 결과에 힘입은 바 컸다.¹³⁾ 이들 노력들은 독일인들의 의식변화에 그리고 유럽 속에서 독일이 재탄생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3.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동독) 과의 기록관리 교류

서독 연방기록관의 탈나치화 작업 외에 다른 또 하나의 큰 역사적 업적은 동독과 기록의 교류를 위한 노력을 행한 것이었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분단 극복 노

12) Hans-Dieter Kreikamp, “Nachweisbeschaffung für ehemalige NS-Zwangsarbeit /innen”, in: Mitteilungen aus dem Bundesarchiv 3 (2002), pp. 28-31; Hans-Dieter Kreikamp, “Polisch-Deutsche Zusammenarbeit bei der Nachweisbeschaffung für ehemalige NS-Zwangsarbeit/innen”, in: Comma 2004 3/4, pp. 191-196.

13) Klaus Oldenhage, Prosecution, Resistance, Compensation, Reconciliation and Democratisation. The Heritage of two Repressive Systems in one Country. The Case of German Archives (2005년 8월 한국기록학회 국제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

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1) 독일 국가의 분단과 기록관리 공동체의 분단 그리고 기록의 이산문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이 동서독으로 분단되어 독일 기록관리 공동체도 분단되었지만 양측 아카이브들과 아키비스트들은 1950년대 후반까지는 가능한 활발히 교류를 하였다. 그러다가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질 때 양측의 교류는 단절되었다. 서독에서는 연방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서독 아카이브 시스템이 발달하고 동독의 경우는 중앙집권주의에 의해 발전해 나갔기 때문에 양 지역의 국가적 운영체계가 크게 차이를 보이며 진행되는 가운데 거기에 맞게 기록관리 제도도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¹⁴⁾

동독에는 서독지역의 지방기록관 기록들이 일부 보존되게 되었다. 이는 전쟁 중, 특히 1942년 연합국의 공습이 잦아진 후, 제국기록관, 프러시아 주립 기록관, 그리고 다른 주들 도시, 여타의 기록보존소 들의 기록들이 안전한 보존을 위해 동독 지역의 칼리염산광, 소금광 등의 장소로 이동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많은 귀중한 서독지역의 기록들이 동독지역에서 보존될 수 있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서독지역의 기록들로서 동독지역의 광산들에 보존되었던 기록들은 동독 기록관들의 소유가 되었다.

또 전후에 각 점령국들은 자신의 지역들에서 독일 기록들, 특히 나치 지배와 관련된 기록들을 압류하였다가 반환하였는데, 이 기록들이 원래의 출처지역과 달리 보존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예를 들어, 소련은 점령기간 동안 3개의 한자 도시 (Hansa Stadt), 즉 브레멘, 뤼벡 그리고 함부르크의 귀중한 기록들의 일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또한 소련은 마인츠 (Mainz) 시청 아카이브의 기록들 그리고 트리어 (Trier) 행정구역 (Katasterverwaltung aus dem Regierungsbezirk)의 기록들의 일부를 압

14) Friedrich P. "Kahlenberg, Democracy and Federalism: Changes in the National Archival System in a United Germany", *American Archivist*, Vol. 55 (Winter 1992), p. 73-4.

류했다.

그런가 하면 서독지역에는 전쟁 중에 서방 연합국이 노획한 기록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서독지역의 기록관들은 맥클렌부르크 (Mecklenburg), 안할트 (Anhalt) 지역의 기록들과 그라이스발트 대학 (Universität Greiswald) 의 기록들을 보존하게 되었다.¹⁵⁾ 거기에다가 동독지역 소유의 지방기록물들이 전쟁 중 안전을 위해 서독지역에 보존되었다가 서독 기록관들의 소유가 된 것들이 있었다. 서독지역에는 나치 독일이 전쟁 중 소련의 점령 지역에서 탈취한 소련 기록들도 일부 있었다.

프러시아 주가 제 2차 세계대전 후 소멸되었다. 그리하여 프러시아 주립 기록들의 경우도 새롭게 보존 장소를 발견하여야 했다. 서독과 동독 기록관들 모두가 프러시아 기록관들의 기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¹⁶⁾ 서독과 동독의 기록관들은 1961년 베를린 장벽 설치이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양 독일의 아키비스트들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산된 기록들 그리고 프러시아의 기록들이 원래의 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그곳의 질서에 맞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2) 동서독의 이산된 기록에 대한 공동의 교환 노력

기록의 이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독일의 아키비스트들 그리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는 위치의 정치가들이 초기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브레멘의 시장 (Bremer Senatspräsident) 카이젠의 (Wilhelm Kaisen) 노력이 돋보였다.

15) Klaus Oldenhage, "Archive im innerdeutschen Dialog - Zur Geschichte der Rückkehr deutscher Akten und Urkunden in deren Heimatarchive", in: Vertretung des Landes Rheinland-Pfalz beim Bund (hrsg.), *Archive im innerdeutschen Dialog, Ausstellung aus der DDR zurückgekehrter Urkunden und Akten*, Bonn 1988, p. 6.

16) Friedrich P. Kahlenberg, *op. cit.*, p. 73.

특히 1955년 포츠담에 있는 동독 중앙 아카이브 (Deutsches Zentralarchiv in Potsdam) 대표와 3개의 한자 도시 브레멘 (Bremen), 함부르크 (Hamburg) 그리고 뤼벡 (Lübeck) 시 기록관 대표들의 회합이 중요했다. 여기에서 이들은 아카이브 전문 관점에서 기록 교환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1955년 당시 서독이 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고 동독이 WTO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하는 등 독일의 분단체제는 더욱 고착화되었고 구조적으로 냉전의 골이 깊어졌다. 특히 아테나워 정부의 일방적인 서유럽통합정책과 동독 및 동유럽 국가들과의 교류단절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인해 동서독 기록교환 교류는 쉽지 않았다. 이러한 거시적 상황은 기록관리 분야의 미시적 교류노력을 방해하는 불가항력의 벽이었다.

이러한 기록관리 분야의 노력은 서독의 동방정책의 결실로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었다. 서독 총리 브란트 (Willy Brandt)가 추진한 동방정책은 “접근을 통한 변화 (Wandel durch Annäherung)”를 기조로 동독과의 모든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이 동독의 경직된 정책과 체제에 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확신이 동방정책의 기저에 깔려있었다. 1972년의 동서독 기본조약에 의해 동서독 사이의 문화적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로 함으로써 박물관 및 기록관의 교류가 특히 촉진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박물관 및 기록관의 교류가 독일 민족의 역사와 문화 전통에 대한 공동의 의식을 함양하게 해주고 그에 기초하여 공동의 정체성을 보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신념에 근거했다. 당시 브란트 총리는 ‘하나의 민족문화 (eine Kulturnation)’ 개념을 강조하였고, 특히 1973년 1월 18일 연설에서는 “분단에도 불구하고 언어, 예술, 문화, 일상생활과 정신문화유산의 공통성에 기초한 민족은 영원하다”¹⁷⁾ 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정신문화유산의 공통성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독일의 기

17) 황병덕외 지음, *신동방정책과 대북포용정책. 브란트와 김대중의 민족통일대구상*, 도서출판 두리 미디어 (2000), p. 295에서 재인용.

록문화유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거시적 상황이 변했음에도 구체적으로 교류를 성사시키기에는 세부적인 난제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양 독일 사이에 내재한 프러시아 문화유산에 대한 서로 상이하고 대립적인 법률해석이 협상 타결의 크나큰 장애물로 작용했다. 1985년에 가서야 양 독일 사이의 협상에서 프러시아 문화유산에 대해 문제가 된 법률적 사항을 제외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타결을 보게 되었다.

서독은 당시 코플렌츠의 연방기록보존소가 보존하고 있는 기록들 중에 독일 나치가 전쟁 중에 소련으로부터 탈취한 것들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또한 소련이 전쟁 중 탈취한 독일 한자 (Hansa) 도시들의 기록들을 동독에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는데, 서독은 이에 대한 반환을 어떻게 요구해야 할지 숙고해야 했다. 서독은 이 두 문제를 협상에서 연계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련과의 문제는 동독과의 기록교류에 대한 협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서독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소련과의 협상을 미룬 채 동독과의 협상에만 진력했다. 동독과 이 협상을 진척시키는 데 있어서 서독 정부는 연방의회 (Bundestag)와 각 정당들 그리고 각 주정부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연방의회는 1985년 12월 19일 법률당사자 청산법의 개정 (Novellierung des Rechtsträgerabwicklungsgesetzes) 을 가능하게 했다. 이 법은 1965년 9월 6일에 입안되었다. 이 법의 개정을 통해 현재 서독 기록관들에 소장된 동독지역 출처의 기록들을 동독으로 넘기는 것이 가능해 졌다. 이 기록들은 원래 프러시아 기록관들에 보존되어 있었다.

개정법에 의하면 서독 연방 내무장관이 개별기록들을 동독 내지는 동베를린으로 반환하는 것을 결정하는 경우에 이 개별 기록들에 대한 서독의 신탁 행정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호의적인 정치적 그리고 법률적 조건들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독일 사이의 기록관리 전문가들 협상 결과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번에는 서독이 동독에 양도할 수 있는 프러시아 문화유산의 양을 어느 규모로 산정해야 하는지를 놓고 동서독 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서독에게는 매우 중요

하였는데 서독은 이미 1957년 7월 25일의 프러시아 문화유산 재단 설립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서독이 동독에 너무 많은 양의 프러시아 문화유산을 넘겨주어 재단설립이 어렵게 되는 경우, 이는 기존의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해결책으로서 서독이 베를린-달렘(Berlin-Dahlem)에 소재한 비밀 국립 아카이브 재단의 프러시아 문화유산 기록들에 대한 마이크로 필름을 동독에 넘겨줌으로써 실질적인 양도 기록의 부족분을 보완해 주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독 측이 다시 다른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렇게 기록교환을 합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서독이 동독에 비해 훨씬 많은 귀중한 기록들을 소유하게 된다는 측면을 제기했다. 즉, 동독 측은 기록교환에서 초래된 형평성 결핍의 문제를 제기하며 최종 합의안 서명을 거부했다. 이리하여 서독의 정부와 아카이브전문가들은 전쟁시기의 폭격을 피해 서독지역으로 이동된 동독지역 출처의 기록들 외에도 부헨발트(Buchenwald)의 나치집단수용소 기록들을 동독에 넘겨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 기록들은 나치의 희생자들을 밝혀내는 데 크게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해 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것들이었다. 나치에 의한 인명 희생 및 인권 침탈이 엘베 강(Elbe)과 베르나 강(Werra)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발생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탈나치화 작업을 위해 그 가치가 매우 큰 기록들이었다.¹⁸⁾ 이 지역의 희생자들이 주로 부헨발트로 집결되었던 것이다. 추가적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정부는 프러시아 문화부의 기록들과 학문, 교육, 시민교육부(Reichsministerium für Wissenschaft, Erziehung und Volksbildung)의 기록들을 동독에 넘겨주기로 하였다. 이들 기록들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가 1950년 포츠담에 있는 동독 중앙 아카이브로부터 빌린 것들이었다.¹⁹⁾ 이는 분단의 상황 속에서 양 독일이 빌려주고 빌려 받은 기록

18) Vertretung des Landes Rheinland-Pfalz beim Bund (hrsg.), *Archive im innerdeutschen Dialog. Ausstellung aus der DDR zurückgekehrter Urkunden und Akten*, Bonn 1988, p. 9.

19) Ibid..

들에 대한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잊혀졌던 것을 상기하여 반환하는 것이어서 특별히 흥미로운 일이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서독의 제안들이 동독에 의해 접수 되고 이 제안들이 성실히 실현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협상이 결말을 맺었다.

협상의 결과 동독으로부터 서독의 원 소유 기록관들에게 다음의 기록들이 반환되도록 하였다:

- 한자 도시들의 기록들 (뤼베크, 브레멘, 함부르크)
- 마인츠와 킬 시청 아카이브의 기록들
- 트리어 행정구역 출토의 기록들
- 본에 있는 라인 주립 병원 아카이브와 도서관의 소장 기록들 그리고 라인란트의 향토단체들 아카이브 및 도서관 소장 기록들
- 서독의 모든 지역에서 수집된 동독지역 출처의 기록들

서독으로부터 동독의 원 소유 기록관들에게 다음의 기록들이 반환되도록 하였다:

- 슈베린 (Schwerin) 의 주립 아카이브 기록들 그리고 오라니엔바움 (Oranienbaum) 소재 안할트 (Anhalt) 국립 아카이브의 기록들
- 그라이프스발트 (Greifswald) 대학교의 기록들
- 뤼벤 (Lübben), 프렌츠라우 (Prenzlau), 카라우 (Calau) 그리고 템플린 (Templin) 소재의 시청 및 시의회 기록관의 기록들
- 베를린에 거주한 이전 작센 사절단의 (Gesandtschaft) 기록들
- 안할트 (Anhalt), 맥클렌부르크 (Mecklenburg), 작센 (Sachsen) 그리고 튀링겐 (Thüringen) 지역에서 수집된 서독지역 출처의 기록들

1986년 11월 12일 전문가 협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최종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렇게 1986년 11월에 최종결과가 도출될 수 있었던 데는 1972년의 기본 조약의 후속협상으로서 1973년 11월부터 시작된 동서독간의 문화교류협력을 위한 협상이 1986년 5월 문화협정으로 체결되는 역사와 또한 관련이 있었다.

동독에 있는 서독의 상임대표부는 동독의 외무부에 1986년 11월 12일의 Note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들 (검색도구 포함) 그리고 동독의 다른 문화재들이 양도될 것임을 통보했다.²⁰⁾

- 쉬베린 (Schwerin) 의 주립 아카이브 기록들
- 오라니엔바움 (Oranienbaum) 소재 안할트 (Anhalt) 국립 아카이브의 기록들
- 그라이프스발트 (Greifswald) 대학교의 기록들
- 뤼벤 (Lübben), 프렌츠라우 (Prenzlau), 카라우 (Calau) 그리고 템플린 (Templin) 소재의 시청 및 시의회 기록관의 기록들
- 베를린에 거주한 이전 작센 사절단의 (Gesandtschaft) 기록들
- 부헨발트 (Buchenwald)의 집단수용소 (KZ) 기록들
- 안할트 (Anhalt), 맥클렌부르크 (Mecklenburg), 작센 (Sachsen) 그리고 튀링엔 (Thüringen) 지역에서 수집된 서독지역 출처의 기록들-
- 안할트 (Anhalt), 맥클렌부르크 (Mecklenburg), 작센 (Sachsen) 그리고 튀링엔 (Thüringen)의 광산 기록들, 할레 (Halle)의 광산 지역과 스톨베르크-베르니거로데쉬 (Stolberg-Wernigerodisch) 광산 지역들의 기록들
- 외비스펠데 (Oebisfelde) 지역의 철도부설 그리고 운하건설에 관한 기록들 및 설계도
- 1950년 뒤셀도르프에 있는 주립아카이브가 포츠담의 독일중앙아카이브로부터 빌린 이전 프러시아 문화부와 학문부의 기록들
- 브란덴부르크 지역의 역사 기록들에 대한 마이크로 필름
- 베를린 경찰청의 기록들에 대한 마이크로 필름
- 베를린 프리드리히-빌헬름 대학의 해양학 연구소와 박물관의 기록들
- 쉬베린의 이전 맥클렌부르크 지방 도서관의 14세기 출처의 Passional-

20) Ibid., p. 11.

Handschrift

- 쉬베린의 이전 맥클렌부르크 지방 도서관의 헬더린 수사 ((Hölderin-Handschriften) 기록들
- 드레스덴의 이전 작센 지방 출처의 1457년 Mainzer Psalter
- 이전 쉬말칼덴 지배에 대한 기념비 기록들

같은 날 동독 외무부는 서독의 상임대표부에게 다음과 같은 문화재 및 기록들이 서독에 양도될 것임을 통보했다.²¹⁾

- 튀백 시청 아카이브의 기록들
- 브레멘의 국립 아카이브 기록들
- 함부르크의 국립 아카이브 기록들
- 마인츠 시청 아카이브 기록들
- 킬 시청 아카이브 기록들
- 본의 라인지역 주립 병원 기록들과 다른 병원 단체들의 기록들
- 코플렌츠와 자르브뤼켄에 있는 주립 아카이브들의 Vermessungs- und Katasterunterlagen 기록들
- 철도행정에 대한 기록들
- 광산에 관한 기록들
- 뉴른베르크 지역 아카이브들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기록들
- 함부르크 소재 Reederei 연합회 Versorgungskasse 의 기록들에 대한 마이크로 필름
- Sparkasse (저축은행) Essen 과 하노버 기계제조 회사의 기록들에 대한 마이크로 필름들
- Codex Balduineus (Balduineum Kesselstatt)

21) Ibid..

실질적으로 기록교환을 수행하는 작업을 위해 동독의 국립아카이브 행정부서 (Staatliche Archivverwaltung) 와 코플렌츠 소재 서독 연방 아카이브가 실행권을 위임받았다.

1986년 12월부터 1987년 10월까지 모두 다 해서 6개의 대형 컨테이너 차량의 수송 그리고 여러 작은 수송들을 통해 원본 기록들이 서로 교환되었다.

서독은 마이크로필름들을 더욱 양도해야 하는데 당시에 이들은 아직 생산되지 않았다. 이 수송을 하면서 아카이브 기술상에 양 쪽이 인정하는 방법을 따랐다.²²⁾

이 일은 아카이브의 행사를 넘어 미디어 기관들의 보도 초점이 되었다. 양독 사이의 협력 정신은 다음과 같은 데서 분명히 나타났다. 양독 아카이브 전문가들은 반환된 기록들을 역사연구를 위해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하였다. 기록의 정리와 기술에 있어서 상대방지역의 아카이브 원칙에 의거하여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²³⁾ 1986년 11월 12일의 규정들 (Regelungen) 그리고 원본 기록에서 완전하고 성실한 실행은 역사 연구를 위해 양독 사이의 정치적 기후 (분위기) 변화를 위해 의미심장한 역할을 하였다. 서로 다른 체제의 협상 당사자들은 전문 분야의 원칙에 의해 공동의 역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²⁴⁾ 아카이브 교류는 양독 사이의 문화협정을 생명력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했다.²⁵⁾ 이러한 동서독 기록관리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국제기록평의회 (ICA)가 큰 중재 역할을 수행하였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듬해에 독일이 통일됨으로써 더 이상 분단국의 양 진영사이의 교류와 협력은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연방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독일통일에 맞추어 아카이브의 재결합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었다.²⁶⁾ 이러한 독일의 경험은 다

22) Ibid., p. 14.

23) Ibid., p. 15.

24) Ibid., p. 17.

25) Ibid., p. 18.

26) Friedrich P. Kahlenberg, "Democracy and Federalism: Changes in the National

음 장에서 설명할 현재의 남북관계 그리고 통일 후의 기록관리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III. 대한민국 기록관리의 국가·사회적 역할

1. 유구한 한국의 기록관리 전통과 기록관리 근대화의 실패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대로 한국은 역사적으로 기록관리에 있어서 빛나는 전통을 가진 선진국이었다. 한국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을 비롯 여러 개의 기록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독일의 구텐베르크 금속활자 발명 이전에 직지라는 금속활자를 만들어 인쇄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고려시대 팔만대장경 등 수많은 인류의 정신문화 결정체로서 기록들을 생산하여 보존해 왔다. 조선시대 사고제도도 한국 기록관리의 독특한 세계적 우월성을 극명히 보여주는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관리 문화 전통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수양을 강조한 한국의 정신문화 유산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 무속은 물론 불교, 도교 그리고 유교 등 성심을 모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종교 및 학문 활동의 지고한 목표로 설정했던 정신문화 전통 속에서 기록의 생산과 보존 활동 및 그 기록에 대한 학습은 그 정신문화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수단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기록관리 전통이 근대화로 치장된 서세동점의 서양 제국주의의 세계적 확대와 이에 편승한 일본의 제국주의의 침탈 속에서 그 동력과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게 되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19세기 후반 및 20세기 초반에 진행되었다.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서세동점은 하나의 역사적 현실이었고

Archival System in a United Germany”, *American Archivist*, Vol. 55 (Winter 1992), pp. 72–80.

이 현실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대응하는가 하는 점이 한국 근대사의 핵심 쟁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기록관리 전통이 능동적으로 서양의 것들과 만나고 거기에서 변증법적인 융합을 꾀하는 그러한 노력을 제대로 추구해 보지도 못한 채 한국은 찬란한 기록관리의 전통을 단절시키고 말았다. 한국은 수동적으로 일본이 근대화의 이름으로 전하는 그리고 일본에 의해 수용된 서양식의 기록관리를 일본을 통해 기형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것마저도 한국의 기록관리 발전 자체를 위해서 라기 보다는 일본의 제국주의 통치 수단으로서 식민지 행정체제를 갖추는 과정에서 추진되었다.²⁷⁾ 즉, 한국이 근대의 기록관리 제도를 구축함에 있어서 한국의 기록관리 전통과 서양의 기록관리 전통을 능동적인 차원에서 변증법적으로 접합시켜 진정한 기록관리 근대화를 실현할 수도 있었으나 그러지 못하고 그것을 일본 식민통치의 도구로 전략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2. 분단과 독재체제하의 기록관리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얻게 된 해방의 공간에서 한국인들은 기록관리 제도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과거의 빛났던 기록관리 전통에 대해서도 무지한 채 당면한 생존과 이념의 격랑에 휩싸이게 되었다.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전승 강대국들 간의 이념과 사회·경제 체제의 대결에 근거한 냉전의 전개와 더불어 한국의 분단은 고착화되어 갔고 한국 내부에 그 냉전의 틀이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 사람들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취약성 속에서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전의 빛나던 기록관리 전통에 대한 복구와 발전적 계승에 대해서도 눈을 뜰 여유를 갖지 못하였다.

유럽에서 전쟁의 범죄를 묻는 뜻으로 독일이 분단된 것처럼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분단되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고 아이러니 하게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희생되었던 한국이 분단되었다. 이는 전쟁의 원인과 전쟁범죄에 대한 과거청산과는

27)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승일, “조선총독부의 기록수집 활동과 식민통치”, *기록학연구*, 제 15호, pp. 3-37 참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전후 승전국들인 미국과 소련의 전략적 점령과 체제 경쟁에 의거한 결과였다. 그런데 이 과정은 한국 내부의 이념 대립과 분단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기록관리를 체계화 하고 이에 근거해서 일본 제국주의와 이에 협력한 세력에 대한 단죄를 단행하고 희생자들에게 보상의 길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국은 너무나 기록관리 개념과 멀리 떨어진 상황에 놓여 있었다.

남한은 미국에 의해 점령되었고, 북한은 소련에 의해 점령되었다. 각각의 점령국들은 점령기간 동안 생산된 기록들은 물론 일본으로부터 압류한 기록들도 자국으로 압송했다. 당시 한국인들은 기록관리에 대한 의식 미약으로 기록들을 반환 받을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독일의 당시 상황과 큰 차이점을 보이는 현실이었다. 서독이 기록관리 제도를 재건하기 위하여 동독과 가능한 협력을 하려했고 현행의 기록들을 위해 서독 내부에서 연방기록관을 우선적으로 창설하였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독일과 다르게 국립기록관이 없는 가운데 남북한 분단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는 분단된 양쪽에서 새로이 근대적 의미의 기록관리가 시작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리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분단의 상황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남한에 대한 침입으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의 동족상잔의 처절한 비극적 전쟁이 속개되었다. 이 전쟁은 차후에 남한 (대한민국)에서 모든 우선순위를 반공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남과 북은 서로 힘을 합쳐서 기록관리의 역사적 전통을 복원해 내고 현시대에 맞게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텐데 이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상호 극단의 적대관계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 당연한 결과로서 기록관리의 작업이 기록에 의거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보존·발전시키고 공동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에 대한 과거청산을 피하는 자산이 된다는 생각을 할 여유를 갖지 못하였다. 남과 북은 그러한 선언적인 노력도 시도해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탈식민지화 작업이 불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친일세력이 정치·사회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식민지 지배시대의 기록에 대한 보존 노력이 더욱 취약하

게 되었다. 기록보존은 매우 부담스러운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거기에다 동족상잔의 비극은 기록보존을 더욱 회피하게 만드는 중요한 배경적인 요소가 되었던 것이다. 이는 과거와의 진정한 대면이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는 설명을 의미한다. 이는 전후에 같은 냉전시대의 논리에서 분단되어 있던 독일의 역사와 달리 진행된 한 단면을 기록관리 분야가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맥락이다.

분단된 상황에서 대한민국(남한)의 지도자들은 정보원으로서 기록이 북한에 의해 접수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록보존에 대해 매우 불안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²⁸⁾ 즉, 남한에서는 기록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했다. 전쟁이 발생할 때에 기록 정보가 ‘적(북한)’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²⁹⁾ 이는 기록유산을 안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고 관리하려 했음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기록의 폐기 또는 보존기간 축소 그리고 분산 보존이 제도적으로 자행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한국에서 기록관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들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의 분단 상황과 기록관리와의 어떤 함수 관계를 읽을 수 있다.³⁰⁾

정부는 행정상의 필요성에 의해 1969년 8월 23일 남한에 국립기록 보존소를 창설하였다.³¹⁾ 그러나 이는 서고가 없는 기록보존소였다. 행정상의 필요성에 의해 기록보존소를 만들었지만 ‘적’에게 넘어갈 정보원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서고 없이 만들었던 것이다.

1975년에는 영구보존 기록들에 대한 소산 보존 계획이 또한 구체적으로 수립

28) 북한의 경우는 이러한 맥락에서 문헌고가 산지에 건설되어 있으며 엄격하게 비밀보호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박건홍, *한국 국가기록 관리의 이론과 실제*, 역사비평사(2003), p. 195.

29) 이경용, “한국 기록관리체제 성립과정과 구조. -정부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제 8호, pp. 13-14, 44-45.

30) 북한도 전쟁에 대비하여 기록관을 특별하게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북한의 기록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다. 기록관리에 관하여 북한은 중국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건홍, *op. cit.*, pp. 192-204 참조.

31) 이 시기부터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는 1999년 시기까지의 한국 기록관리 제도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현수 “한국 현대 기록관리 제도의 정립(1969-1999)”, *기록학연구*, 제 15호, pp. 39-66 참조.

되고 그 이후 실행되었다. 이를 위해 영구 보존될 기록들이 평가·선별되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에 이 평가·선별을 위한 전문 아키비스트도 그리고 선별·평가 기준도 존재하지 않았다. 총체적으로 기록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가운데 행정 현장 공무원들이 이를 수행하였다. 그러다 보니 무차별하게 기록들이 폐기되는 결과가 이루어지고 비체계적으로 분산되어 보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록들이 쉘른버그(Th. Schellberg)가 말하는 1차적 가치인 행정 업무 가치기준에서 평가되기 쉬었으며 기록들의 2차적 가치인 역사·문화적 가치는 매우 등한시 되었다. 그러다 보니 보존보다는 폐기에 역점이 두어졌고 전쟁의 경험과 냉전의식은 무차별적인 폐기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다.

1984년에 부산에 국가기록 보존을 위한 서고를 만들었다. 특별히 부산에 이 서고를 만든 것은 앞에서 언급한 소산정책의 일환이었다. 부산은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유사시에도 기록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존되고 또는 처분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냉전시대의 남북 적대 관계가 기록관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관점에서 국가기록원이 오랫동안 자체 청사를 갖지 못한 이유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³²⁾ 동족상잔의 비극을 치룬 냉전 시대의 분단국가로서 한국은 중앙 집중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기록정보들이 유사시에 적에게 모든 것을 노출시킬 수 있는 ‘판도라 상자’가 될 수 있다는 커다란 공포의식에 짓눌려 있었다.

그런데 분단된 한국에서 북한은 공산주의 독재체제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종류로서 군부정권을 중심으로 한 독재체제가 1972년 유신헌법 제정 이후 1987년까지 지속되었다. 독재체제는 국가의 분단 상황 속에서 그 정당성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분단 상황의 논리와 독재정권의 존재 사이에는 깊은 상호 연결고리가 내재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분단의 대결 구조가 심화되면 될수록 독재정권은 그들의 정당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독재정권들은 기록들을 위에서 언급한 위험스러운 정보원으로서 파악하고

32) 이경용, op. cit., p. 16.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기록관리 개념들을 소유했다. 거기에는 독재정권들은 그들의 독재치부들이 다 기록화 되는 그러한 상황을 허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가능한 한 기록을 생산하지 않거나 이미 생산된 기록들을 무차별 폐기하려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분단 상황 속에서의 독재체제가 지속되는 역사는 한국 기록관리의 발전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요인이었다.

3. 민주화와 남북화해 정책 그리고 기록관리의 발전

한국에서는 민주화와 냉전시대의 분단 극복을 위한 남북화해 노력이 기록관리 발전의 주요 전제조건들이었다. 여기에서 북한의 기록관리 상황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고 민주적인 제도발전이 기대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남한에서의 발전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한 민주화 운동의 결실은 기록관리 발전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졌다. 이 시기를 정점으로 정치·사회·문화의 제도적인 민주화가 자리 잡기 시작하였으며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공고히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진지한 고민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가운데 모든 공공의 행위들이 기록화 되어 보존되고 이를 일반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정보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시민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면서 국립아카이브가 창설되던 것과 같은 맥락을 생각하게 된 것이었다. 이는 추후에 판공비 공개 및 정보공개법입법운동 등 시민사회 운동 과도 연계되었다.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정착과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기록관리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었다. 이는 유럽에서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 발전한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역사 이래 발전한 기록관리의 국가·사회적 역할이 한국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이러한 연계맥락은 앞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서독에서 제 2차 세계대전 후 강력하게 추구된 것이었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민주화 정책들 그리고 특히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의한 남북교류가 적

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또한 한국의 기록관리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김영삼 정부 시대에 기록물관리법에 대한 입법 제안이 이루어졌다. 김대중 정부는 기록물관리법 제정을 100대 정책과제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들이 한국의 기록관리가 1990년대 후반부터 괄목하게 발전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1999년에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고 기록전문가들이 제도적으로 양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기록학의 체계적인 발전이 촉진되었다.³³⁾ 민주화와 더불어 남북화해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서독의 동방정책에 비견될 수 있는 것으로 남북간에 교류와 협력을 통한 화해를 이루어 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소위 파급효과에 기초한 신기능주의 전략을 적용하고 자 한 것으로, 예를 들어 해로를 통한 금강산관광이 육로로 파급되었으며, 선박을 이용하던 것에서 버스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다시 개성공단의 설립으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남북 역사가 교류 등 학문적 그리고 제 종교·사회·문화 단체들의 교류가 촉진되었다. 이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결과로 채택된 6·15 공동선언으로 집약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햇볕정책은 독일의 동방정책과 매우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동방정책을 통해 동서독 기록교류의 큰 틀이 만들어 졌고 그에 기반해서 실질적인 기록관리가 있었음을 앞장에서 서술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남북화해 정책 속에서 기록관리의 발전과 남북의 교류촉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2003년에 등장한 노무현 정부는 참여 정부를 표방하면서 기록관리를 행정과 사회의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심화,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국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핵심 방편 중의 하나로 상정하였다. 그리하여 기록관리가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었다.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이 확립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행정의 전자기록 생산이 독려되고 그에 따른 전자기록관리가 크게 발전하였다.

33) 1999년 이후 한국의 기록관리 발전에 대해서는 김익한, “기록학의 도입과 기록관리혁신 (1999년 이후)”, *기록학연구*, 제 15호, pp. 67-93 참조.

이렇듯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10여년 동안 한국의 기록관리 분야는 서양의 기록관리 선진국들이 몇 세기의 오랜 역사적 세월을 걸쳐 이룩한 것을 단 시간 내에 실현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³⁴⁾

특히 노무현 정부는 주변국들 특히 일본과의 과거사를 정리하는데 주력하였는데 여기에서 기록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 등의 활동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활동 가운데 과거사 정리의 증거물들로서 많은 문서기록들은 물론 구술기록들이 새로이 수집되고 기존의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보존되게 되었다.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지배 시대의 반인권적 행위들에 대한 규명과 정리 그리고 그에 기반한 청산노력 등이 많은 부분 기록관리 분야의 업적에 힘입어 추진되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거사 정리 작업들은 때로는 정신적으로 감내하기가 두렵고 힘든 과거를 정면으로 진실하게 대면하는 그러한 노력들로서 정확한 과거의 사실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들을 통해 추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청산이 논의되기도 하고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교과서 편찬 시도도 민간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활동들은 유럽차원의 나치시대에 대한 역사 청산 그리고 유럽차원의 역사교과서 편찬 시도 등과 비교될 수 있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다. 독일과 프랑스 간의 공동의 역사교과서가 이미 출간되었다.

그런가 하면 한국전쟁 당시의 가해와 피해의 문제들도 규명하고 정리하여 진정한 미래지향적 화해를 이루겠다는 노력들도 추진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적 차원의 작업들도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한국을 위해 큰 의미가 되었던 미국의 지원과 원조를 더욱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기억함과 아울러 전쟁 중에 미군들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부분에 대한 규명 작업들도 추진되었다. 이는 한미관계를 진정한 우호관계로 열어가는 데 필수적인 한미관계 역사의 공과를 새롭게 역사화 하는 작업으로 이해되었다.

34) 그러나 한국의 기록관리 분야가 짧은 시간에 발전하였기에 취약점을 또한 가지고 있다. 현재 기록관리 분야가 폭넓은 국민적 이해와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 못한 것이 바로 그 점이다.

군부 독재 시대의 반인권적 행위들에 대한 규명과 정리 그리고 청산작업들이 또한 추진되었다. 이리하여 노무현 정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비롯 여러 과거사 정리 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이는 서독이 기록에 기초하여 그리고 기록관리 기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1950년대 후반부터 탈나치화 작업을 수행하던 것과 비교될 수 있는 역사적 맥락이다.

노무현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2007년 남북정상 회담의 결과로 채택된 10·4 선언으로 압축·상징되었다. 남북 역사가 교류가 활발히 진전되었다. 독일의 동서 사이의 기록관리 분야에 대한 협력과 교류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망해 볼 때 앞으로 남북한 사이의 기록관리 협력과 교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기록관리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북한의 체제와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아 기록관리에 있어서 매우 폐쇄적일 것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교류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극히 힘들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서 비교가 되지 않게 성공한 남한이 자신감 있게 이러한 시도를 적극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동서독의 기록관리 교류에서 보듯이 정신문화유산의 공통성을 진작시키기 위해 이러한 추구 자체가 대단히 큰 상징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의 기록관리 체계 마련, 공동의 기록문화 유산관리 그리고 공동의 과거청산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역사인식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인으로서 공동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확장해 가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국제 아카이브 협회, 예를 들어 국제기록평의회 (ICA)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들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북한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ICA의 “동아시아기록평의회 (EASTICA)”에 가입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ICA가 동서독 간의 기록관리 교류와 협력을 위해 크게 역할을 해주었다. 북한도 ICA 회원이다. 물론 여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의지적인 노력 속에서 교류·협력의 물꼬를 열 수 있는지 모른다.

이러한 협력과 교류과정에서 흩어져 있는 한국 역사 속의 찬란한 기록문화 유산을 공동으로 수집하고 정리하고 활용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상호 교환을 통해 공동의 전시활동 등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야기된 한국과 중국사이의 ‘역사왜곡 문제’를 둘러싼 긴장관계도 남북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할 수 있으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시대 청산 문제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관리의 역사와 현실의 맥락들은 기록관리가 평화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인류 사회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기록학 전문가들도 기록관리의 이러한 국가 및 사회를 위한 그리고 국제 차원에서 갖는 의미를 직시하고 기록학 학문과 실제를 거시 역사의 맥락에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추구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본론을 통해 필자는 투명사회 보장과 민주화 그리고 진실된 과거와의 대면을 통해 화해와 평화를 정착시키는 수단으로 독일에서나 한국에서 기록관리 발전이 이루어져 왔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록관리의 기능은 기록관리가 사람의 집단 의식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과 관계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민주화와 남북관계의 화해 발전은 깊은 함수 관계에 있고 이의 발전을 위해 기록관리의 정착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 민족주의의 동력이었던 기록관리가 민족주의가 왜곡되어 나치 과시즘으로 까지 확장되어 전대미문의 제 2차 세계대전과 전쟁범죄의 비극을 만들어 낼 때 그에 봉사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패한 뒤 국가적 분단을 맞이하여 새로운 독일로 태어나는 데, 즉 민족주의를 넘어 유럽 속의 독일로 초국가주의적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기록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초국가주의적 역사의식이 있기에 나치 과거사 청

산, 동서독 간의 기록관리 교류 협력 등에서도 큰 성과를 보일 수 있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민족주의와 파시즘의 역사에 대한 반성을 크게 했고 여기에 기록관리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는 기록관리의 국가·사회적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맥락이다. 서독에서의 나치 과거 청산과 기록관리 그리고 동서분단의 극복수단으로서 동서독이 기록관리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했던 것은 한국의 상황에 큰 시사점을 준다. 한국의 남북관계도 동아시아 공동체의 비전속에서 교류될 필요가 있고 기록관리가 그 차원에서 이루어져 남북의 기록관리가 교류하고 동아시아 기록관을 만들며 민족주의에 봉사하는 기록관리를 넘어 초국가주의적 대의인 국제평화에 이바지 하는 기록관리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민주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면서 기록관리가 발전하고 거꾸로 기록관리의 발전이 민주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상호관계는 기록관리의 국가·사회적 역할에 대한 세계사적 예시가 될 수 있다고 보아진다.

참 고 문 헌

- 곽건홍, *한국 국가기록 관리의 이론과 실제*, 역사비평사 (2003)
- 김익환, “기록학의 도입과 기록관리혁신 (1999년 이후)”, *기록학연구*, 제 15호, pp. 67-93.
- 노명환, “19세기 독일의 역사주의 실증사학과 기록관리 제도의 정립. 랑케, 지벨 그리고 레만과 출처주의/원질서 원칙”, *기록학연구*, 제 14호, pp. 359-388.
- 이경용, “한국 기록관리체제 성립과정과 구조. -정부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제 8호, pp. 3-56.
- 이승일, “조선총독부의 기록수집 활동과 식민통치”, *기록학연구*, 제 15호, pp. 3-37.
- 오동석, “기록관리의 국가·사회적 역할. 민족주의·초민족주의와 집단적 기억을 중심으로”,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전현수 “한국 현대 기록관리 제도의 정립 (1969-1999)”, *기록학연구*, 제 15호, pp. 39-66.
- 황병덕외 지음, *신동방정책과 대북포용정책. 브란트와 김대중의 민족통일대구상*, 도서출판 두리 미디어 (2000)
- Booms, Hans (Hrsg.), *Das Bundesarchiv. Geschichte und Organisation, Aufgaben, Bestände*, Koblenz 1988,
- Kahlenberg, Friedrich P., “Democracy and Federalism: Changes in the National Archival System in a United Germany”, *American Archivist*, Vol. 55 (Winter 1992)
- Kreikamp, Hans-Dieter, “Nachweisbeschaffung für ehemalige NS-

- Zwangsarbeit/innen)", in: *Mitteilungen aus dem Bundesarchiv* 3 (2002), pp. 28–31.
- Kreikamp, Hans–Dieter, "Polisch–Deutsche Zusammenarbeit bei der Nachweisbeschaffung für ehemalige NS–Zwangsarbeit/innen)", in: *Comma* 2004 3/4, pp. 191–196.
- Loth, Wilfried, *Die Teilung der Welt*, München 1980
- Oldenhage, Klaus, "Prosecution, Resistance, Compensation, Reconciliation and Democratisation. The Heritage of two Repressive Systems in one Country. The Case of German Archives" (2005년 8월 한국기록학회 국제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
- Oldenhage, Klaus, "Prosecution and Resistance, Compensation and Reconciliation: Two Repressive Systems in one Country", in: *Comma, International Journal on Archives* 2 (2004)
- Oldenhage, Klaus, "Archive im innerdeutschen Dialog – Zur Geschichte der Rückkehr deutscher Akten und Urkunden in deren Heimatarchive", in: Vertretung des Landes Rheinland–Pfalz beim Bund (hrsg.), *Archive im innerdeutschen Dialog, Ausstellung aus der DDR zurückgekehrter Urkunden und Akten*, Bonn 1988
- Vertretung des Landes Rheinland–Pfalz beim Bund (hrsg.), *Archive im innerdeutschen Dialog. Ausstellung aus der DDR zurückgekehrter Urkunden und Akten*, 1988

〈국문초록〉

냉전시기 분단국에서 기록관리의 국가·사회적 역할: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아카이브 역사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노명환

1919년에 설립된 독일 제국아카이브 (Reichsarchiv)가 포츠담에 있었고 포츠담은 소련 점령지역, 후에 동독에 속했기 때문에 제국아카이브는 고스란히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동독)의 소유가 되었다. 이는 독일에서 국가의 분단과 함께 기록관리 제도의 분단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극히 불평등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그리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서독)은 제국기록관의 모든 기록들을 상실한 나라로서 출발하였다. 1949년부터 산출되는 정부 기록들을 관리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에 직면한 서독은 1952년 연방 수도 본 (Bonn)에서 가까운 코플렌츠 (Koblenz)에 독일연방기록관을 설립했다. 따라서 이 아카이브는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서독)의 건국 이후 생산되고 있는 기록들을 이관 받는 작업을 할 뿐 그 전의 기록들을 보유하지 못한 채 출발하였다. 서독과 동독의 기록관들은 1961년 베를린 장벽 설치이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서독은 어렵게 환수한 기록들 그리고 새로이 수집된 기록들을 토대로 1950년대 말부터 탈나치화 작업을 떠나갔다. 동서독 간에 기록교류를 추진했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얻게 된 해방의 공간에서 한국인들은 기록관리 제도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과거의 빛났던 기록관리 전통에 대해서도 무지한 채 당면한 생존과 이념의 격랑에 휩싸이게 되었다.

분단된 상황에서 한국의 지도자들은 정보원으로서 기록이 상대방에게 접수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록보존에 대해 매우 불안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즉, 한국에서는 기록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했다. 전쟁이 발생할 때에 기록 정보가 적(북한)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리하여 기록의 폐기 또는 보존기간 축소 그리고 분산 보존이 제도적으로 자행되었다. 독재시대가 또한 기록관리의 장애가 되는 시기였다.

따라서 민주화와 남북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또한 한국의 기록관리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었다.

주제어: 기록관리, 냉전, 독일연방공화국, 대한민국, 기록의 국가·사회적 의미

<Abstract>

The national and social role of the archives in the divided countries during the cold war era: centered on the comparative view of the West German and South Korean archival history

Noh, Meung-Hoan

The Archives of the German Reich were established at Potsdam in 1919. Between 1945 and 1990 Potsdam belonged to the Soviet zone of occupation or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East Germany). So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est Germany) founded Bundesarchiv in Koblenz in 1952.

From the late 1950s the returned records and archives which had remained in Germany were used as evidence for investigations against Nazi criminals. The archives of West Germany and East Germany tried to promote to exchange the dispersed record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d to keep the archival practice of the Colonial Chosun Government General. Generally people did not realize well the importance of the archival being in the South as well as in the North. In this backgrou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glected to develop the archival system and the documents were not able to be preserved systematically. Many

documents of the colonial era were taken away by Japan and the USA and the Soviet Union. The records of the occupation era by the USA military government were brought to the USA. The people and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 were not enough conscious to come to the idea to bring back these documents. Many people carried fears against their activities in the colonial era and tried to abrogate those documents. The investigations against the past evil-doings, namely the decolonialization process on the basis of the archives could not be successful.

The Korean War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occurred in 1950 and lasted for three years. After the war experience, many people tried to abrogate the documents produced during the war. The strongest anti-communism and the extreme hate against the North and the fear for the revival of the war dominated the societ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ame to the even more desperate ideas to preserve the documents dispersed to various regions and possibly abrogate them.

The year 1987 signified the time of the epochal transformation towards the democracy of the South Korean society. The civil movement to establish an ordinary national central archives and other various kinds of archives started from this period. The people found out the necessity of the archival system to keep the transparent society as the essential basis for the democracy. From the beginning of the 1990s the South and North began to develop the earnest dialogues in some sense. The endeavors for the reconcili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helped also the developments of

the Korean archival system.

Key words: Archival Management, Cold War, Federal Republic of Germany,
Republic of Korea, National and Social Meaning of Archives

투고일 : 2008년 12. 25 / 심사일 : 2009년 1. 3 ~ 1. 15 / 게재확정일 : 2009년 2. 20

필자소개 : 노명환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이며 서양현대사, 유럽통합사, 냉전시대의 독일사와 한국사, 서양 기록관의 역사, 서로 다른 문화 이해와 국제지역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연락처: hoannoh@hanmail.net)